

# 대한민국에서 다(多)문화 사회가 가능한가

박 노 자(Vladimir Tikhonov, 오슬로대, 노르웨이)

1. 고대 한반도 사회는 고대 일본 내지 중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언어, 문화상의 특수성이 돋보이는 여러 종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에서는 약 기원 후 1-2세기에, 백제에서는 4세기 중반, 신라에서는 5세기 이후로 왕권이 강화돼 고대 국가의 기본 틀이 잡히기 시작한 데에 따라 국가의식은 이미 성장돼 있었지만 국가가 주민들의 언어, 풍습 등을 균질화시킬 만한 능력을 결여했다. 한 사례로, <주서> (周書)의 백제전에서는 백제가 “왕의 성은 부여씨로 ‘어라하’라고 부르고, 백성들은 ‘건길지’라 말하니 중국말로 모두 왕이다”와 같은 방법으로 묘사된다. 이것이야말로 부여계통의 지배자 그룹과 마한 계통의 피지배자 그룹 사이의 언어적 이질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오늘날 전라남도 지역에 해당되는 마한 잔여 세력에 대한 복속 작업은 약 5세기 후반 - 6세기 전반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완료됐기에 부여 계통의 백제 귀족들에게 예측된 마한 계통의 인구 사이에서도 상당한 문화, 언어적인 이질성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백제를 ‘하나의 나라’로 보지만 그 안에서는 - ‘국민’의 문화, 언어, 풍습이 어느 정도 동질화된 근대 국가와 달리 - 다양한 이질적 집단들이 존재했음을 간과하면 안된다.

고대 한반도 한 국가의 내부만 해도 이 정도 복잡다단했다면 과연 한반도의 여러 고대 국가, 또한 그 고대 국가들이 간접 통치했던 ‘외부 지대’ (예컨대 말갈들의 거주 지역) 사이에서의 이질성은 어느 정도이었겠는가? 보통 ‘우리’ 고대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한반도 정치체들을 뭉뚱그려 ‘우리 민족’으로 설정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고대에 특히 비교적 강성한 제국형(型) 국가들은 수많은 종족과 문화 층위로 구성되곤 했다. 고구려가 옥저와 예 등 물론 말갈과 낙랑 출신의 한인(漢人)들까지 신민(臣民)으로 받아들인 것이나 통일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과 일부 말갈을 통섭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백제만 해도 중국 지식인과 일본 호족 출신을 관료로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영산강 유역에서 특히 5세기말 - 6세기초로 추정되는, 수많은 왜 계통의 토기와 갑옷, 거울 등이 출토되는 일본 열도 식의 전방후원(前方後圓)형 고분들이 분포돼 있는데, 백제 왕들이 이 지역의 호족을 누르기 위해서 왜 계통의 친(親)백제 호족들을 그쪽에 일종의 관리자로 파견했을 가능성이 강하다는 것은 국내 일부 학자의 의견이다. 하여간 백제에서 백제인과 함께 신라인과 고구려인, 왜인, 중국인들이 다 섞여 산다는 <수서> (隋書)의 기록 이상으로 한반도 고대 국가의 복잡성을 잘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 백제에다 조공을 바쳤다가 백제가 망한 뒤인 662년부터 신라로 조공을 바치며 그 직할지가 되지 않은 탐라(제주도)는 아예 언어 내지 문화적으로 독자적 단위를 형성했다고 봐야 한다. 제주도의 독특한 언어야 근대에 접어들어도 ‘물 사람’들로서 알아듣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고대 한반도 육지의 부여계 언어(고구려어와 백제 지배층의 언어)와 한(韓)계 언어(진한, 마한 언어) 사이의 차이가 만만치 않았다. 즉, 복잡한 종족 구성을 가졌던 중국의 역대 제국들이나 중국, 한반도 계통의 도래인과 혼슈 북부의 에미시(蝦夷), 그리고 규슈 남부의 구마소(熊襲), 하야토(倭人) 등 선주민의 여러 부족들이 어울려 살았던 고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대 한반도가 종족적으로 매우 복잡적 여러 사회들을 이룬 것이었다. 종족이 다양하고 일상 언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았던 고대인들이 ‘민족’이라는 의식 없이 단지 일차적으로는 가족과 마을 등 미시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국가에 대해 소속감을 가졌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 역사가 과연 덜 자랑스럽게 되는가?

2. 중세사, 즉 고려와 조선시대에 단일한 조선민족체(한민족체: Korean ethnos)로의 균질화 내지 동질화의 과정은, 무엇보다 불교와 유교의 이념 및 의례, 풍속의 보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불교의 각종 ‘법석(法席)’들과 유교의 가례(家禮)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동질성이 높은 지배층 의식이 형성됐다. 동시에 민중계층까지도 불교 신앙에 이끌리고 각종의 유교적 의례에 자율적으로든 타율적으로든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배 계층보다 비록 저(低)수준이지만 ‘민족체로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불교/유교 지식인들이라는 중세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여전히 국경보다 자신들의 보편적 이념에 중점을 두는 ‘보편인’ 내지 ‘세계인’으로 남아 있었다. 한 사례를 들자면, 조선 초기의 억불 정책을 대해 조선 승려들이 명나라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명나라 황제를 보편적인 ‘최고의 중재인’으로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개화기 이후로 ‘사대주의’라고 비난을 받게 된 중세 유림들의 대(對)중국 의식도 사실 ‘중화(中華)’를 보편적 시공간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중세적 보편주의의 연장일 뿐이었다. 즉, 종교/도덕이념에 의한 주민 동질화 효과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기독교에 의한 주민 동질화 과정의 한계성도 사실상 마찬가지였다. 1870-80년대까지 특히 비교적으로 후진적 남부 지역의 프랑스 농민들이 자신들을 ‘프랑스 시민’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자 ‘천주교 신도’로 인식한 점과 마찬가지로, 중세의 한반도 주민들에게도 ‘전체’로서의 민족체(“我邦의 邦民”)보다 유교나 불교 등 보편적 이념과 지역적 특수성은 더 중요했다. 물론, 이와 동시에 고려 후기의 단군 신화에 대한 강조(<삼국유사>, <제왕운기> - 1280년대의 역사인식의 전환) 등은 고려인 모두의 ‘동질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고려인 사이에서 국가의식보다 지방 소속 인식이 더 강한 경우가 많았다. 1202~04년 경주에서 신라를 부흥시키자는 반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1236~37년에는 담양 지역에서 백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반란도 일어났다. 그만큼 ‘한반도 공통의 정체성’보다는 각 지역의 옛 국가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방적 정체성이 더 일차적이었던 것이다. 지방의 강력한 특성이란, 조선 왕조에 들어서도 그 의미를 잃지 않았다. 예컨대 조선초기에 호패법과 호적법 등은 전체 인구의 ‘균질화’를 도모했지만, 1467년의 함경도 이시에 난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지방 유력자들의 반발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비록 유교의 보급 등으로 인해서 조선 중기, 후기의 조선 민족체의 균질화 과정은 많이 진척됐지만 함경도나 제주도, 평안도, 황해도까지 ‘머나먼 고향’(遐鄉)이라고 중앙에 의해서 차별되고 이질시됐다. 개화기, 일제시절의 남한/중부 지방 출신과 서북, 함경도 출신 사이의 지역 감정 다툼 등은 바로 이와 같은 ‘균질화 과정의 미완전성’을 반영했다.

3. 근대에 접어들어 한반도의 구미 지역 중심의 국제사회에의 편입 과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단일 민족’ 내지 ‘순혈’과 같은 신생 민족주의적 이념들이 탄생됐다. 단재 신채호 (1880-1936)와 같은 1900년대 계몽주의 논객들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조선민족 전체를 혈통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혈통주의적 의식을 고취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개화기-일제 시절은 조선민족의 ‘국제화’를 가져다 주었다. 러시아/소련, 만주, 일본, 미국으로의 이주/이산/강제 징용-징병 등은 외부와의 ‘혼합’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조선 내 비(非)조선민족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져 갔다. 일제말기에 조선의 2천만 명 정도의 인구 중에서는 75만 명 (3% 이상)은 일본인이었으며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일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중국인 인구도 약 6만 명이 이르고 이외에는 백계 러시아인과 미국 등지 계통의 선교사와 기업인 등 다양한 ‘외인’들이 거주했다. 노동, 인력을 어디에서든지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는, 또 전통사회에 다소 어려웠던 인구의 국제적 이동, 각종의 ‘섞임’과 ‘스며들’을 재촉하여 한반도라는 자본주의적 세계 체제의 주변부에게서 일종의 ‘국제성’을 가져다 주었다.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등세계체제로의편입을위한운동인 ‘문명개화’ 운동의 지도자들의 국제결혼은 바로 이 “국제성”을 잘 상징한다.

그러나-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성”은 종족 사이 갈등의 여지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일본, 미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인종적, 민족적 차별의 피해자가 됐는가 하면 간도 이주자들은 현지 중국인과 수많은 갈등들을 일으켰다. 작가 최서해의 「탈출기」나 「홍염」과 같은 작품을 보면 조선 계통의 간도 이주민들이 중국, 만주 계통의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실감할 수 있다. 고리

대금업 등의 종사자가 많은 조선 내 중국계통 인구에 대한 조선인의 악감정이 높았으며 이는 예컨대 작가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서의 ‘왕서방’과 같은 캐릭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을 탐닉하고 조선 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왕서방’은, 그 당시 조선 지식인이 본 ‘어글리 차이니즈’의 전형이었다. 조선 내 일본 이주자와 조선인 사이에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수없이 많았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결혼이 허용되고 1920년대 이후로 표면적으로 총독부에 의해 장려됐음에도 두 민족 사이의 소외감, 적대심, 이질감이 커서 연례 200쌍 이상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억압과 착취, 차별로 점철된 제국주의적 ‘국제화’는 결국 조선인의 매우 강한 혈통적 민족주의를 부추겼을 뿐이다. 특히 태평양 전쟁 총동원 시기이자 민족 말살기인 1937-45년간 총독부의 조선인-일본인(‘內鮮’) 결혼 장려 정책을 ‘민족 말살 정책’의 일부로 파악한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결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제국주의 시대의 비(非)자발적 ‘섞임’은 결국 혈통주의적 배타심을 낳지 않을 수 없었다.

4. 1945년에는 식민지 시대의 ‘국제성’은 막을 내렸다. 만주, 일본에서의 동포 사회와의 연결이 잠시 끊기거나 어렵게 되는 한편, 조선 내의 비(非)조선인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본인이 거의 다 ‘인양’되는 한편 각종의 차별 정책에 시달리는 중국 계통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지금 2만 명도 되지 못한다. 백계 러시아인들은 한국 전쟁 때에 납북돼 총살되거나 미국, 호주로 이민 갔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주의를 이념으로 삼은 남한 역대 정부들은 ‘국민’과 ‘민족’을 동일시하는 한편 그 ‘동질화’와 ‘타자 배제’에 총력을 경주했다. 의무교육과 통제된 언론, 전자 매체, 징병제 등을 통해 남한 국민 집단의 언어, 습관, 정치 사상(반공주의 주입)까지 ‘동질화’됐는가 하면 ‘민족적 타자’들이(중국인 등) 별도의 학교에 다니고 외국(대만 등) 국민으로서 징병 대상에서 빠지는 등 그 ‘동질화된 집단’에서 배제됐다.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교 등에서 극심한 차별에 시달려 결국 도미(渡美) 이민이라는 선택을 강요 받은 것은 많은 혼혈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민족’과 ‘국민’을 합친 배타적인 혈통주의는 그렇게 해서 남한에서 군림하게 됐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법적으로 명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만 196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서 원칙상 외국인과의 결혼은 금기시됐으며, 소련, 동독 등지에서의 유학 시절에 이미 국제 결혼을 한 이들은 강제 이혼 등 혹독한 처사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두 체제의 표피적인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족주의적 배타주의 1990년대 이전의 남한과 북한의 중요한 공통점이었다.

5. 199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자본주의는 급격하게 ‘세계화’ 과정에 돌입했다. 한국 자본이 해외로, 특히 아시아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됐으며,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인상된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도 자본의 입장에서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한국의 지배계급으로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혹독한 착취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분리, 통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혈통주의’ 이데올로기는 용도폐기될 수 없었던 것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단일민족’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동포’와 같은 용어는 적어도 당위적으로 그 호소력을 유지했다. 즉,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57%를 차지하는 중국의 조선족들은 특히 국내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위 인정을 받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 장기 체류 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동포’ 아닌 외국인 노무자 (일반 노무직 노동자)들은 취업허가 제도 하에서 원칙상 3-4년 이상의 체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리고 ‘한민족 혈통’ 유무를 떠나서-‘동포’든 아니든-절대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하여 ‘한국인’이 되는 길은 거의 차단돼 있다. 2008년 5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외국 계통 인구인 891,341명 중에서 국적 취득자는 약 7%에 불과했는데, 그들 중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배제돼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국민’이 될 자격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혈통적 ‘민족’의 폐쇄성은 최근의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 포기 등으로 많이 극복됐지만 ‘국민’ 집단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매우 폐쇄적인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 주된 이유가 ‘비국민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단기적 이윤 쟁기기가 수월하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할 필요라도 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 자체는 ‘자본의 세계화’인 만큼 그 한계성도 결국 자본가 계급의 이해 관계가 갖는 한계와 일치된다.

6.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49%)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원칙적으로 ‘국민’ 집단과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포기했다는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상징해야 할 것은 전체 재한 외국인의 약 23%를 차지하는 (주로 여성인) 결혼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다. 결혼 이민이 2000년대 초반에 급증된 관계로 결혼 이민자들이 참여 정부 시절 이후부터 국가의 온정주의적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됐다. ‘단기 체류 강요’, ‘불법 체류 시 단속 및 추방’, ‘가족 동반 금지’, ‘직장 이동 억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자세다. 이와 같은 자세가 취해진 배경에는 결혼 이민자들의 높아져 가는 비중이 있다. 결혼이민자가 이미 2007년에 7만 5천명을 넘었다. 연간 다문화 결혼 비율이 그 해에 14%를 초과하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중에서 약 35%가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는 시대가 됐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뒤엔 이민 2세가 거의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근본적으로 온정주의적이지만, 미흡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이다. 말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간다’고 하지만 모자라는 예산을 주로 결혼이민자의 ‘동화 사업’에 쓴다. ‘다문화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노력’을 과시하려는 각급 단체·기관들은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을 연다는 소식을 경쟁적으로 매체에 올린다. 거기에도 외국인 여성에게 한복을 입혀 ‘윗분’에게 절을 올리게 하는 등 ‘우리 전통문화 교육’을 시켜 ‘모범적인 한국 며느리로 만들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면 한국어를 잘 구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글교육은 사실 아직까지 체계화되지도 않고 태부족하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민족’이나 ‘혈통’이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을 이 땅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외국인 여성과 그 자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보존하는 것도 그들의 인권 중 하나다. 이민 2세들은 한국 시민이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문화·언어적으로 베트남인이나 필리핀인으로 남을 권리도 있다. 우리가 정말로 다양성의 사회로 가자면, 북유럽 나라들에서 하는 것처럼

럼 이민 2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학교에서 그들을 위한 모국어반을 특설해 적어도 일부 과목을 그들의 모국어로 가르치는 등 그들의 문화·언어적 독자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7. 참여 정부나 현재 정부 정책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정주해야 할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강압에 가까운 ‘한국화’와 각종의 ‘배려’를 통한 순치를 도모하는 한편 정주의 권리를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기간 집중 노동력 착취의 보장에 그 초점이 두어져 있는 듯하지만, 다시 한 번 한반도의 고대 사회를 닮는 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든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다. 2018년부터 남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205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8.2%에 달할 초(超)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민자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현상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싫든 좋든 간에 다(多)종족, 다(多)민족 사회로의 행진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 구성원의 외모가 다양해지고 20세기 초반 때에 만들어진 ‘순혈’, ‘단일 민족’과 같은 언사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바로 다(多)문화 사회로 가는가 라는 부분이다. 태평양 전쟁 총동원 시기에 한반도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이 살아도 한국인들에게 고유의 성씨와 언어조차 쓸 수 없는 초강경의 동화 정책들이 실시되었던 것은 다(多)종족 사회이었을는지 몰라도 ‘다문화 사회’는 아니었듯이 외부인을 단기간에 착취할 ‘인력’ 내지 ‘빨리 빨리’ 한국인으로서 동화될 ‘농촌 총각들의 구제 수단’로 보는 사회도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는 아닐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가자면 이민자들도 고유 문화와 언어 등을 보존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주류’, 즉 ‘토박이 한국인’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유교적 보편주의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 지역사(중국사)와 ‘아방(我邦) 역사에 대한 공부’가 보통 병행됐듯이 우리도 ‘국사’ 담론의 폐쇄성을 극복하여 아시아 주변 국가의 맥락 속에서 한국사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만약 고교 졸업자가 역사 수업 때에 한국의 유인석과 안중근 등과 함께 필리핀의 ‘아이 장군’ Gregorio De Pilar(1875-1899)이나 월남의 武元甲(1911 태생)과 같은 아시아 피압박 민족들의 항미 투쟁 영웅까지도 배울 수 있다면 이는 ‘주류’에 의한 국내 체류의 필리핀, 베트남 계통 인구의 역사,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

치 공유'를 의미할 것이다. 타자에 대한 전반적 존중, 그 존엄성의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다양한 사회'의 전제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주의적 내부 통합에 필요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숭배 대상인 구미 지역의 '선진' 문화 이외에 그 어떤 문화도 '유의미한 타자'로 보려 하지 않는, '동양사'와 '서양사'를 알아도 남미, 인도, 중동 역사 전문가들을 거의 지금까지도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우리들의 '탈아론(脫亞論)적' 집단 의식으로서의 '아시아'로 돌아가 재한 외국 계통 인구의 95%를 이루는 비(非)구미권 출신들과 양쪽의 존엄성 인정에 기반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철지난 민족주의 내지 국민주의와 함께 패권적 구미권에 대한 전망의 심리까지도 극복해 다른 아시아인들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아시아의 시민', 그리고 나아가서 아프리카와 남미 등지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세계 체제 주변부, 準주변부 시민'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단순한 다민족 사회 수준을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 외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